

# “조직 · 선거관리만이 당의 주요 업무 아냐”

## 민주 전북도당 혁신위 제2차 토론회

민주 시민교육 거점 공간기능 담당할 ‘더불어아카데미’ 개설  
선출직공직자 정책역량 강화 위한 ‘더불어포럼’ 설립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혁신위원회(위원장 윤준병)는 지난날 29일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책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토론회를 진행했다.

혁신위원회 위원 박진희, 이정현, 김학수 위원의 발제를 통해 도당·지역위원회 및 선출직공직자의 정책역량 강화와 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혁신위원들은 발제와 토론을 통해 당의 주요업무가 조직과 선거관리에 국한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정책생산능력과 의지, 책임정당

으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비전과 목표, 지역현안과 쟁점에 대한 분석과 대응, 대안 그리고 당원이 참여하는 정책제안이나 공약사업 추진의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당원과 예비정치인의 일상적인 놀이터이자 민주 시민교육의 거점 공간기능을 담당할 ‘더불어아카데미’ 개설, 상시적 당내외 선출직공직자의 정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진행 및 짧은 정치지도자 육성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더불어포럼’ 설립이 제시됐다.

또한 자치분권정책협의회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지방의원 의원총회를 지역정책 공론화의 장으로 만드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별도 법인이나 사회적기업 형태의 정책연구소 설립을 제안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혁신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발굴을 위해 도당과 전북도 두 축의 상호보완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각급 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정책의견을 모아내 이를 당과 의원들의 공약으로 구체화 시키야 한다”며 “도당이 환경변화에 따른 아젠다 정립의 중요한 축이 돼 이를 위해 중앙당과 인력·예산을 협의, 빠른 시일 내로 정책연구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혁신위원회는 오는 13일 ‘선출직공직자 평가 및 공천혁신 방안’에 대한 제3차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지역균형발전과 전북도 현안을 논의하는 등 발로 뛰는 특위 활동에 맹활약을 하고 있다.

## “국가균형발전 정책 지역주도형으로”

도의회 공공기관 유치 지원 특위, 정세균 총리와 면담  
정 총리 “막중한 국정현안 속 전북현안 해법 모색 중”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동용)는 2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지역균형발전과 전북도 현안을 논의하는 등 발로 뛰는 특위활동에 맹활약을 하고 있다.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역주도형으로 추진해 전북발전을 앞당기자는 염원으로 지난 10월 출범한 전북도의회 ‘제2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첫 활동으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임원진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가져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정세균 총리 면담은 두 번째 공식활동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을 청취하고, 앞으로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방향에 조언을 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게됐다.

이날 위원들은 전북도의 성장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설명하면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치, 국립공공의료 대학원 설립 및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도민의 염원이 담긴 각종 현안이 빠른 시일내에 결실을 맺도록 정총리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문을 구했다.

조동용 위원장은 “총리께서 막중한 국정현안 속에서도 전북현안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해법을 찾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며 “전북도의회는 지역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로 내실있는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파트너십을 갖고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K뉴딜 성공 위한 지자체의 역할

전북도당은 이번 자치단체 토론회를 통해 K-뉴딜이 자치단체에 안착하기 위한 방안과 신규 사업을 찾고 K-뉴딜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완주군청 제공)

2일 완주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 주관으로 K-뉴딜 성공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방안이란 주제로 자치단체 토론회가 열렸다.

## “국민연금 연수원, 지역 유치 환영”

민주 윤준병 의원, 후보지에 정읍시 최종 선정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커… 예산 확보 위해 최선”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국민연금 연수원 설립 후보지 선정에 정읍시가 최종적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서, 외부방문객 유치 및 지역 소상공인 경제 발전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연금 연수원 유치를 환영하며, 국민연금 연수원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정읍시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 드린다”며, “연수원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생산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크며, 국민연금 연수원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결산위원회로서 우리 고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에 두고 정읍·고창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에 국민연금 연수원 설립

김영범 의심되면 '1339' 로

두세훈 도의원, 농민공익수당 신청 누락 방지 위한 장치 마련



전북농민 공익수당 신청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농민공익수당 신청 누락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은 해당 상임위(농산경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이 제3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올해 처음으로 10만6,614 농가에 643억원에 이르는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 후 행정절차상 누락 농가에 대해 지원조건 등을 검증한 후 467농가에 대해 농민공익수당을 추가로 지급했다.

하지만 지금도 각 시군에서 일부 농가가 추가 신청을 요청하고 있어, 농민공익수당 신청 누락방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두 의원은 전북도가 제출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사업 신청 안내, 자격 확인을 위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수정 가결된 일부 개정조례안에 의해 전북도는 농민축산식품부에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유호상 기자

## 도내 기초의회 의정 소식

정읍시의원들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힘 모아달라” 촉구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 의원들은 2일 의회 청사 앞에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북을 비롯한 전국 농어촌 지역의 낙후되고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하고 평등한 양질의 보건의료 혜택과 국민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조상중 의장은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정치권의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길 바라며 정읍시민들과 함께 정상적인 추진을 기대하며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